광주 동물보호소 '딜레마'…운영할 업체가 없네

수탁업체 지난해 말 운영 포기
3차례 공모에도 응모 업체 없어
동물보호단체가 임시 운영
보호동물도 200마리 초과 '과밀'

"고용승계에 서비스 안일" 비판도
"광주시 직영 전환해야" 목소리

'반려견 13만' 광주에서 광주시 동물보호소를 맡아 운영할 업체가 나서지 않고 있다.

2011년 북구 본촌동에 개소해 민간위탁으로 운영됐던 '광주 동물보호소'를 맡아 운영하던 수탁업체가 지난해 말 물러난 뒤 세차례의 공모에도 운영을 할 업체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안정적인 동물들의 보호와 입양을 위해서라도 위탁운영이 아닌 광주시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동물보호소는 유기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유실 동물의 주인을 찾아주거나 입양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동물보호소(부지 1200㎡)는 건물 2개 동에, 동물보호실, 진료실, 사무실을 갖추고 있으며 진료 수의사를 포함해 12명이 근무하고 있다.

동물보호소에 위탁운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동물병원,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동물보호단체 중 하나다.

광주시는 지난해 수탁업체와의 계약 만료에 따라 올해 1월 2023년 12월까지 동물보호소를 운영할 민간위탁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했다. 하지만 응모업체가 없어 지난 3월과 6월까지 총 세차례 공모를 진행했지만 응모업체가 한곳도 없었다.

이에 현재 임시수탁을 맡고 있는 동물보호단체 '위드'가 임시기간을 연장해 내년 12월까지 운영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위드도 동물보호소를 운영할 업체가 나타나면 한달 기간을 두고 통보 후 계약해지를 한다는 조건으로 연장계약을 했다. 동물을 내버려둘 수 없어 임시로 떠맡은 상태인 것이다.

동물단체 등은 동물보호소 위탁운영을 맡을 곳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몇가지 꼽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부족한 예산·인력·공간 이다. 광주 동물보호소는 1년에 7억 15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데 운영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동물보호소에서 수용 가능한 적정 보호 두수가 350마리임에도 200마리나 초과해 550마리를 보호하는 과밀 수용도 원인이다. 광주지역이 동물복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 유기동물 관련 민원이 잦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위탁운영자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승계가 된다는 점 때문에 직원들이 안일한 서비스를 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입양을 하러 두차례나 찾아갔지만 입양 방문시간에 제한을 두기도 하고,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났음에도 출입제한을 풀지 않거나, 시민들의 소통공간에 비판의 글이 올라온다는 이유로 자유게시판을 삭제했다는 등의 지적이 그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광주 동물보호소의 직영 운영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 동물보호소는 세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운영, 지자체 시설을 수탁업체에 임대·운영하는 '시설위탁', 동물병원 등 민간업체가 시설 소유권을 갖고 운영하는 '위탁보호' 등이다.

광주시 북구 본촌동에 있는 광주동물보호소가 위탁운영자 선정에 차질을 빚으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동물보호소 견사에 있는 유기견들. 〈광주일보DB〉

광주시는 현재 시설위탁 방식을 택하고 있다. 농림식품부 조사결과 2020년 기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가 총 280곳의 동물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직영 운영하는 곳은 47곳, 시설위탁은 5곳, 위탁보호는 228곳으로 확인됐다.

반려동물 수가 증가하면서 유기동물 수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유기동물을 좀 더 오래 보호하고 입양처를 찾아주려는 노력을 기울이려면 지자체가 직접 시설을 지어 보호하는 직영 동물보호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이 동물단체들의 주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모에 응하는 업체가 없는 것은 예산부족보다는 동물보호단체간 마찰이 주된 이유로 보인다"면서 "2024년 완공 예정인 광역동물복지센터를 더 확장한 후에 직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학동 붕괴 참사 책임자 1심 선고 7월→9월로 연기

광주 학동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선고가 오는 9월로 연기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현수)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58) 씨 등 7명과 법인 3곳의 선고 공판을 오는 9월 7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당초 선고공판은 6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변경했다. 선고를 연기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시공사인 현대개발산업 측 현장소장인 서씨와 일반철거 하청업체 한솔의 현장소장 강모(29)씨, 재하도급 업체 대표이자 굴삭기 기사인 조모(48)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7년 6월을 구형했다.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차모(60)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현대산업개발 측 안전부장 김모(58)씨와 공무부장 노모(54)씨,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50)씨에게는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대산업개발과 한솔기업, 백솔건설 등 공사업체 3개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3000만~5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해체계획서를 무시하고 공사하거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해 6월 9일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던 광주 학동4구역에서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동물수술 전 관리자 동의 필수…위반시 과태료

개정 수의사법 오늘부터 시행
내년부턴 예상진료비 사전고지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에 앞서 소유주 등 동물 관리자에게 진단명·예상 후유증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내년 1월 5일부터는 예상 진료비용도 사전 안내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5일 공포·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수의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구체적으로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동물 관리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과 방법 ▲발생 가능한 후유증 ▲소유자 준수 사항을 구두로 설명하고 관리자로부터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설명 의무가 적용되는 중대 진료의 범위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 수술,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이다. 특히 중대 진료 전 설명 의무와 동의 확보는 동물 소유자 등의 요구와는 관계없이 준수하도록 했다. 설명과 동의 의무를 위반하면 처음에는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2, 3차 위반 시에는 각각 60만원,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해당 절차로 진료가 지체돼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 후,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

내년 1월 5일부터는 동물병원에서 중대진료를 하기 전 예상 진료비용도 동물 관리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다만 진료 지체로 동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 중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진료 후에 비용을 알릴 수 있다.

아울러 내년 1월 5일부터 2인 이상이 운영하는 동물병원, 2024년 1월 5일부터는 모든 동물병원에서 진찰, 입원, 백신접종, 전혈구 검사, 엑스(X)선 검사 등 진료 항목의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흉기 배회' 외국인 과잉진압 논란 인권위로

지역시민단체 진정 제기

흉기를 들고 어린이집 주변을 걷던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20대 남성)에게 테이저건을 쏴 제압한 경찰의 대응〈7월 1일자 광주일보 6면〉을 두고 지역시민단체가 "과잉 대응"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인권네트워크)는 4일 광주시 동구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광산구 월곡동에서 20대 베트남 국적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데 이어 발 등으로 폭행을 저지른 것은 명백히 국가폭력이다"고 주장했다.

인권네트워크는 기자회견 이후 인권위에 해당 경찰관의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사건 현장에는 주민 신고를 받고 경찰관 3명이 출동했는데 테이저건 발사 시점이 논란이 됐다. 경찰은 5차례에 걸쳐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경고했으나 응하지 않자 쐈다는 입장이었지만, 테이저건을 맞은 시점은 이미 흉기를 바닥에 떨어뜨린 뒤였던 것으로 밝혀지면서다. 또한, 전기 충격을 받아 남성이 쓰러진 뒤에도 경찰관들이 물리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광산경찰은 "바로 인근에 어린이집이고 곧 하원 시점이어서 초기에 완전히 진압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해당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장전하느라 미처 흉기가 바닥에 떨어진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네크워크 측 김춘호 변호사는 "아무런 저항이 없고 도망칠 생각도 없는 외국인 남성을 경찰봉으로 때리고 테이저건으로 쏜 행위는 과도한 물리력 행사"라고 맞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상민 행안부장관 내일 광주 찾아 토론회

경찰직장협 "직원 의견 수렴 대응수위 결정"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에 이른바 '경찰국' 신설 방침을 확정한 데 대한 경찰의 집단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광주를 찾아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을 듣는다.

4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 장관은 오는 6일 오후 2시 40분부터 광주경찰청 5층 무등홀에서 일선 경찰관들과 토론회를 갖는다. 토론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에 따라 행안부가 지난달 27일 신설키로 한 '경찰 업무 조직'과 관련된 내용을 두고 이뤄질 것이라고 광주경찰청은 전했다.

토론회 시간은 45분가량 잡혔으나 참석자 소개와 장관 인사말, 마무리 발언 등을 제외하면 실제 토론에 주어지는 시간은 30분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 참석 인원은 유동적이다. 우선 행안부에서는 장관을 비롯해 자치분권 실장, 대변인, 자치분권 정책관, 치안정책관, 경찰 제도 개선 TF 과장 등 6명이 참석자 명단에 올랐다. 경찰 측에서는 임용환 광주경찰청장과 3명의 부장(경무관) 그리고 희망 직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남경찰청과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각 5명에, 광주청 소속 경찰관들까지 포함하면 40명 안팎이 장관과의 토론회에 참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실제로도 많은 직원이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경찰의 노조 격인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이상민 장관의 광주경찰청 방문 및 토론회는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려는 명분 쌓기용이다"며 "일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토론회 당일 대응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움직임이 알려진 지난달부터 경찰은 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반대 성명을 잇따라 낸 데 이어 4일부터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삭발 및 1인 시위를 이어가는 등 반발을 지속하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홍익지구대를 방문해 경찰국 신설 방침을 '정치권력에 의한 경찰 통제'로 규정하고 반발하는 일선 경찰 달래기에 나섰는데, 오는 6일 광주경찰청 토론회도 이런 움직임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4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22타경 1419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로138,104동 17층 1702호[수완동,해솔마을현진에버빌1단지]146.44㎡	아파트	1,380,000,000 1,380,000,000	
2022타경 2641	1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제로50, 102동 15층 1514호[연제동,새한아파트] 59.95㎡	아파트	107,000,000 107,000,000	
2022타경 4135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131번길10, 104동 12층1201호[신창동,신창1차남양휴튼] 125.1218㎡	아파트	591,000,000 591,000,000	2022타경1488 [중복]
2022타경 64786	1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159번길42, 109동 1층108호 59.97㎡	아파트	260,000,000 260,000,000	별도등기있음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22타경 2450	1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452-1 308㎡ [현황 상일부대지및일부도로.공유자문은자지분1/2전부.토지의공부상지목은대지이나현황상 일부대지및일부도로.일부토지는인접지[452-4번지등]에서점유중인것으로조사됨]	대	22,523,550 22,523,550	일괄매각[제시외 건물포함매각].지상소재수목매각제외.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1회로제한.본건건물이소재하는타인소유토지에대한법정지상권성립여부불명함.지적경계가불명한바,정확한사항은측량요
		장성군 황룡면 신기촌길 27 주택43.0㎡ 단층부속사43.0㎡ 제시외 화장실 등36.95㎡[공유자문은자지분1/2전부.주건물주택은공부상면적은43.0㎡이나현황상면적은49.5㎡.본건건물및제시외건물의일부가타지상[451번지등]에소재한것으로조사됨]	단독주택		
[대지/임야/전답]					
2021타경 9546	1	화순군 이양면 강성리 산34 13388㎡[공유자정인기지분12396/13388전부.지상에연고자미상의분묘수기소재]	임야	23,552,400 23,552,40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1회로제한
2022타경 61237	1	나주시 봉황면 오림리 538-8 922㎡[농지취득자격증명제출요함[미제출시보증금미반환],원상회복명령발하여질가능성있음[사실조회회신참조]]	전	28,582,000 28,582,000	지상에연고자미상의분묘5기가소재.맹지.공부상지목'전'이나현황상 "묘지"
2022타경 61992	1	곡성군 오산면 운곡리 453 544㎡[본건지상에김종수외1소유의일반건축물대장[주택]작성되어있고합유로등기됨]	대	64,736,000 64,736,000	제시외건물,태양광설비,지상소재수목및비닐하우스2동매각제외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21타경 75109	1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로94,상가동 지하층비02호[풍암동,한국아파트]161.00㎡	근린시설	116,000,000 116,000,000	제시외냉동저장설비매각제외
[기타]					
2021타경 8956	1	영광군 법성면 진내리 482-2 838.1㎡	대	135,373,620 135,373,620	일괄매각[제시외건물매각포함].제시외건물중수산물창고39.㎡및제시외기계기구냉동설비매각제외.건물중부속건물시멘트벽돌조슬레이트지붕단층변소6.6㎡ 소재불명
		영광군 법성면 진굴비길3길6 1층410.0㎡ 2층373.0㎡[내역 1층410.0㎡제빙냉동공장 2층72.0㎡창고 270.0㎡제빙냉동공장 31.0㎡사무실] 부속건물 사무실44.6㎡ 단층변소6.61㎡ 제시외 창고 등53.72㎡[물건번호1:.감정평가대상토지의소재지번으로타인소유의건물이등기사항증명서,일반건축물대장이등재되어있으나,조사시점당시당해공부상등재된건물과물적동일성이인정되는건물이소재하지않는것으로조사됨.건물은조사시점개보수공사중으로바닥재등이철거또는철거예정으로조사됨.토지는일부가도시계획시설[도로]에저촉됨]	공장및사무실및창고		
2022타경 2542	1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499-1 2236.4㎡ 제시외 창고 등55㎡[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의한 기계기구 목록은 별지와 같음]	공장용지	3,645,977,500 3,645,977,5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매각].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제6조기계기구OverHeadCrane외2식[AUTO9ROBOT메탈실버LINE중compressor소재불명]포함[감정평가서 참조]
		동소 499-9 588.7㎡[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의한 기계기구 목록은 별지와 같음]	공장용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손재로287번길 88 [하남동,가동] 단층616.5㎡ 부속건물 공장[사무실]135㎡[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의한 기계, 기구목록은 별지와 같음] 제시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 Over Head Crane 외 2식[AUTO 9ROBOT 메탈실버 LINE 중 compressor는 소재불명]포함[감정평가서 참조]	공장		
		동소[하남동,나동] 단층212.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의한 기계, 기구목록은 별지와 같음]	공장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22. 7. 19. [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2. 7. 26. [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입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잠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비치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 [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2. 7. 5.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조길호